

檢亂 직전 한총장 융퇴… 파국 봉합될까

중수부 폐지 특수-기획통 괴리감 표출

검찰개혁 진정성 입증해야… 과제 산적

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위기가 전면적인 '검찰(檢亂)'으로 비화되며 직전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시지하고, 최 중수부장이 보복성 감찰이라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대검부장(검사장) 등 검찰간부들이 총장실에 찾아가 임명장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검사장급 간부들부터 일선 초임검사들까지 개인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한 총장이 결국 검찰간부들의 연이은 용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사태는 겨우 진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의 대상이 된 최재경 중수부장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구속)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감찰내용 공개를 놓고는 불씨가 남아있다. 또 최 중수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고 김 검사에게 비위내용을 알아본 것인데 역으로 감찰을 당했다는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제 30일 오후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 발표만 남겨뒀다. 한 총장은 개혁안을 내놓고 나서 곧바로 신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중수부장 즉각 사퇴를”

野 법사위 단독소집 “최악 검봉사태” 성토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국회 법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검찰의 이따금 난맥상을 험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분명한 입장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충석 간사는 “검찰은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지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검찰을 비호하려는 것인지 염려스럽다”고 공격했다.

최원식 의원은 “사상 최고의 ‘검봉’(검찰 봉괴) 사건을 맞아 국민도 ‘멘붕’이 됐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

상도 펼쳐졌다.

한 총장이 직권으로 감찰을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 평검사회의를 극적으로 개최하고 총장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다가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개혁이 전부 쇼’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기획이 ‘주특기’인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한 총장의 뢰진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 검사들은 종간 정도 스텐스를 취했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특수통 검사의 만행 확인 최재경 중수부장과 기획통인 한 총장과의 ‘힘겨루기’ 양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수부장 감찰 사태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 평검사회의를 극적으로 개최하고 총장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다가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개혁이 전부 쇼’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 총장의 개혁안 발표로 이후 협약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18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검찰청 최재경 중수부장. 오른쪽은 한상대 검찰총장. /연합뉴스

는 국민의 관심사를 돌보지 않겠다는 ‘여민불량’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의 국가운영 시스템 붕괴로 표현한 뒤 “검찰총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중수부 폐지라는 거짓말을 하고 중수부장은 중수부 존치를 하기 위해 총장더러 사퇴하고 한다”며 “국민은 인증에 없고 오로지 권력의 사유화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오늘의 검찰 난맥상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실천할 주체는 개혁의 대상인 현 지휘부가 아닌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 지휘부”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새누리 이재오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공직부처 또는 반부패정책부무에 종사한 자로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수처는 3명의 특별검사를 두고 이 중 한 명은 차장의 역할을 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중 ‘北 로켓 대응’ 발빠른 행보

임성남 본부장 방중, 발사 문제 논의

中 선전부장 방북, 자제 요청 가능성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예상이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런 흐름을 정지시키거나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29일 류치바오 공산당 선전부장 겸 정치국원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방북하는 중국의 고위급 인

사인 류부장은 현안으로 떠오른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북측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많이 불편해한다”고 언급, 북한의 도발을 자체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기지 주변에서 분주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제 발사보다는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길에 올랐다. 임본부장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등 중국 인사들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 초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구현 외교부 차관보도 최근 방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주영순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던 KT 젤리케이블의 지정 폐기물 사설을 밝혀낸데다 6년 이상 불법 오픈수를 방류한 남양주 홍수 하수 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 구미 불산 노출 사고와

국제결혼 40%가 재혼

10명중 6명 회사원·자영업자… 농촌총각 7% 불과

중개업체 등을 통한 국제결혼의 약 40%가 재혼이며 50대 이상 신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결혼자 10명 중 6명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이며 농업이나 수산 및 축산업 종사자는 10명 중 1.4명에 불과해 국제결혼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용한 국민 3만 216명 중 과거 혼인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훈 398명(1.2%), 오훈 이상이 104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훈은 2만 100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1만 4604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6434명(19.5%), 농업 2370명(7.2%), 전문직(자격증 보유자) 2238명(6.8%), 일용노동자 2110명(6.4%), 공무원 591명(1.8%) 순이었다. 수산 및 축산업 종사자는 각각 336명(1.0%)과 312명(0.9%)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안 조속히 처리해 달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시 리베리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지원대책과 관련,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 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수기동 [근린시설 4층]	숙박시설 [치평동]
대652㎡, 건2387㎡	대704㎡, 건2042㎡
김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김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나주남평 [주유소]	신안입해 [횟집, 판매시설]
대4428㎡, 건553㎡	대4706㎡, 건1123㎡
김정가 10억6천	김정가 18억
최저가 6억8천	최저가 10억
전북김제 [물류센터]	전주시대진구 [유동주점]
대8076㎡, 건5004㎡	대665㎡, 건988㎡
김정가 25억 최저가 8억	김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화순이양 [공장]	보성을 [상가]
대6536㎡, 건2056㎡	대685㎡, 건763㎡
김정가 99억3천 최저가 2억8천	김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총장로 [근린주택]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215㎡, 건306㎡	대1786㎡, 건408㎡
김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김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 open 예정인 (주)슬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천모(이)명 설것이(여)1명, 훌서방(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월차금, 월차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을 풍립리 171번지 서류접수실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